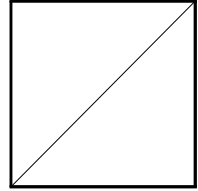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1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3. 2. (제 4 차)

의  
결  
사  
항

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(주)에 대한  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3. 3. 2.

## 1. 의결주문

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'최저자기자본(등록요건) 유지의무 위반' 및 '업무보고서 미제출' 사실이 적발되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이라 함)」 제420조, 제422조, 제449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

## 3. 주요골자

### 가. 최저자기자본(등록요건) 유지의무 위반

-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(주) : 등록취소
- 前 ○○이사 ○○○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6월 상당)

### 나. 업무보고서 미제출

-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(주) : 과태료 56백만원 부과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>

## 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(2022.2.17.) 심의필
-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(2022.11.29.) 심의필
- 청문실시(2023.2.14.)
- 제4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3.2.23.) 심의필

## <별지>

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# 1. 조치내용

#### 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(주) : 등록취소, 과태료 56백만원 부과
  - 조치사유
    - 최저자기자본(등록요건) 유지의무 위반
    - 업무보고서 미제출
  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20조(등록요건의 유지),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 제1항 및 제4항, 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 제1항 제8호, 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제1항,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2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23조(등록유지요건의 완화) 제1호, 제36조(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) 제1항, 제390조(과태료 부과기준) 및 <별표22>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3항 및 <별표3>

#### ☐ 임원에 대한 조치

- 前 ○○이사 ○○○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6월 상당)
  - 조치사유 : 최저자기자본(등록요건) 유지의무 위반
  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20조(등록요건의 유지), 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제1항, 제424조(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) 제3항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23조(등록유지요건의 완화) 제1호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최저자기자본(등록요건) 유지의무 위반

-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,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유예기간(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) 이후에는 매 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
-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(주)는 2019.11월말 자기자본(6.0억원)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(10.5억원)에 미달하였음에도,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.5월말 이후 검사종료일(2021.5.18.)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(10.5억원)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### 나. 업무보고서 미제출

-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·6개월간·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(“분기별 업무보고서”)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(“월별 업무보고서”)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
-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(주)는 2019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업무보고서(2회), 2020.6월 월별 업무보고서(1회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## 관계 법규

### 【 자본시장법 】

**제18조(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)**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2.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
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(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투자운용인력(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갖출 것.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- 가.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
- 나.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

**제20조(등록요건의 유지)**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(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)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**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·6개월간·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 2. 3.>

**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·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
2. 신탁계약,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
3.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
4.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5. 기관경고
6. 기관주의
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**제422조 (임직원에 대한 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 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3. 문책경고
4. 주의적경고
5. 주의
6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**제449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3. 제33조제1항(제335조의14, 제350조,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
- 15의2. 제33조제4항(제350조,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

## 【 자본시장법 시행령 】

**제21조(등록의 요건 등)**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상근 임직원 1인을 말한다. 다만, 종합금융회사(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)인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 4인을 말한다.

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상근 임직원 2인을 말한다.

**제23조(등록유지요건의 완화)** 법 제20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: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.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특정 월말을

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**제36조(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)**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45일을 말한다.

**제373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** ④ 법 제420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(별표 1의 3-12-1 및 3-13-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, 같은 표의 4-121-1 및 4-121-2의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또는 별표 3의 3-14-1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. 이 경우 금융투자업별로 영업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  - 다. 투자자문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,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):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에 응하는 행위
  - 라. 투자일임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, 투자자문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일임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):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채산을 운용하는 행위

**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**[별표3]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(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)**

(단위 : 억원)

등록업무 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투자대상자산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	최저자기자본
5-1-1	투자자문업	증권, 장내파생상품, 장외 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	2.5
6-1-1	투자일임업	증권, 장내파생상품,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	15

**[별표2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**

#### 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



## 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33조제1항(법 제335조의14, 제350조,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13호	6,000
라. 법 제33조제4항(법 제350조,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15호의2	2,000

### 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】

**제46조(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)**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·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. 다만,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.

#### <별표 3> 금융업종별·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

### Ⅲ-8. 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유지요건 위반

#### 1. 제재대상

##### ①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유지요건 위반

-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가 확보하도록 부여한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갖추지 못한 행위(자본시장법 제18조제2항제3호,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, 제3항)

##### ②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

-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가 법령에서 부여한 최저자기자본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(자본시장법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호)

#### 2. 제재기준

##### ①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유지요건 위반

- 부족한 투자권유자문인력, 투자운용인력 및 위반기간(위반월수)를 기준중 중한기준으로 제재(다만, 자문업의 경우 위반기간 기준만 적용)

- 전문인력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 가능
- 투자자문업 또는 일임업 자진폐지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
- 일임 계약고가 없는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
- 위반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

구분	위반기간 <sup>1)</sup>	위반인원	제재양정	
			임직원	기관
자문업	15개월 초과	-	직무정지(정직) 이상	영업정지 이상
	9개월 초과	-	문책경고(감봉)	기관경고
	9개월 이하	-	주의적경고(견책) 이하	-
일임업	12개월 초과	-	직무정지(정직) 이상	영업정지 이상
	6개월 초과	2인	문책경고(감봉)	기관경고
	6개월 이하	1인	주의적경고(견책) 이하	-

- 주1) 위반기간 계산시 신규직원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(최장 2개월)은 불산입  
 2) 위반인원 =  $\sum(\text{각 위반일수} \times \text{위반인원}) / \text{전체 위반일수}$ . 소수점 이하는 절상  
 3) 위반일수 산정시 30일을 1개월로 계산

## ②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

- 유지하여야 할 최저자기자본의 잠식률정도(위반비율)와 위반기간(위반월수) 기준 중 중한기준으로 제재
- 자기자본 확충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자기자본 확충 완료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
- 위반기간이 6개월 이하로서 위반비율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
-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가능

위반비율	위반기간	제재양정	
		임직원	기관
50% 초과	12개월 초과	직무정지(정직) 이상	영업정지 이상
30% 초과	6개월 초과	문책경고(감봉)	기관경고
0% 초과	6개월 이하	주의적경고(견책) 이하	기관주의

- 주1) 위반비율 = (법정 최저자기자본 - 매분기말 자기자본)/법정 최저자기자본×100  
 2) 위반기간은 분기말 기준으로 합산(1분기 위반시 3개월 위반으로 계산)하여 계산  
 하며 위반비율은 매분기말 위반비율을 산술평균함

### III-10. 전업 자산운용사·투자자문사 영업 미영위

#### 1. 제재대상

-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(자본시장법 제420조제1항제8호, 동법 시행령 제373조제4항제1호)

#### 2. 제재기준

- 수탁고 발생여부 및 시정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

구 분		제 재 양 정
영업미영위(수탁고 無)		인가·등록 취소
시정 기간* (수탁고 有)	6개월 초과	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
	6개월 이하	기관경고 ~ 기관주의

\* 위반사유(6개월 이내 영업 미개시 또는 6개월간 영업 미영위)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신규 수탁고 또는 계약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

- 영업 미영위는 회사 영업정책 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한다. 다만, 대표이사 외에 다른 임원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.

#### 3. 가중 및 감경

- 영업 미영위를 이유로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.
-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사고 등으로 장기간 부재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, 계약불이행·부당파기, 부도·파산 등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자산운용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64	02-3145-7630